

## 협의기구.... 그 사이 어딘가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유승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인연은 2002년 경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는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왔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인간위주의 세계관으로 인해 지구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고 지구의 균형을 잡는 일이 지속가능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초기 인천의제21 문화복지분과에서 활동했다, 인천 YWCA의 이사로, 그리고 사회개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과 기업과 행정 3자 협의체인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일원이 된 것이다.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분과, 복지분과, 사회분과, 환경분과로 나뉘어 활발한 활동들 해나갔다. 분과별로 모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현안문제들을 도출해 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찾고자 노력했다.

활동의 영역은 넓어지지 못했으나 멤버들의 멤버십은 고양되었다. 곧 의제 21의 움직임으로 세상의 큰 변화가 올 것같은 생각에 빠져 들기도 했다. 그러나 조직은 확대되지 못했고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가지도 못했다. 2년에 한번씩 위원들의 임기만료가 돌아왔으나 멤버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고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10여년간 활동하던 인천의제 21의 활동을 잠시 접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다시 6년만에 인천의제 21에 가니 법개정으로 인해 명칭이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되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창기 인천의제 21실천협의회는 시청내에 사무실이 있었고 시의 지원도 많이 있었으나 조직내의 갈등과 안일한 활동들이 청사공간의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사무실이 청사밖으로 이전되어 있었다.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채 기업과 행정과 시민의 3자 협의체보다는 시민사회단체들만의 활동에 치중해 있는 듯해 보였다.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한 논의의 장에 인천지속협의 실무책임자나 대표가 참여하는 기회가 줄어들어 있었고 행정의 업무협조기능에 더 익숙해져 있어 보였다. 주무과는 환경정책과였고 삶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업무협조를 얻기에 급급해 보였고 또 하나의 환경단체로 보였다. 시민정책네트워크같은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면서 인천지속협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속협도 하나의 구성원(단체)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다.

협의체인데 협의체가 아닌 것같은 하나의 단체가 아니기에 단체등록(법인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의 단체인 것같은 뭔가 어정쩡한 자리에 놓여져 있어 보였다.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해 보였고 단체로서의 참가는 물론 파트너십으로서의 참여가 아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네트워크로서의 참여를 가능한 하지 않고 주무과인 환경국에 국한하지 않은 소통과 협치를 위한 활동들로 영역을 넓혀 나갔으며 집행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회와의 소통도 넓혀 나갔다.

필요에 의한 외침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했고 의원들과 집행부의 협조들이 따라왔다. 또한 구성원들을 시민사회단체회원은 물론 국민운동단체, 일반시민들까지로 확대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2030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은 모두 함께 해야 한다.

인천지속협은 이제 상상발전소라는 거버넌스기구로서의 거점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을 협의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간운영예산으로 1억 4천정도를 확보하였고 앞으로의 활동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283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의에서 2019년부터 계속 준비해 오던 인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통과시켰다. 그 조례에 따라 업무이관도 환경기후정책과에서 정책기획관실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칠 후면 인천시는 조직개편을 한다. 조직개편에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한 고민이 포함될 것이고 2023년 1분기 중에는 정책기획관실로 인천지속협의 업무 이관이 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본의원이 협의기구,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자리매김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